

제354회 국회(정기회)

국 방 위 원 회

서 면 답 변 서

(‘17. 11. 7. 제354회 예산안 상정)



병무청

위원별 목차

1. 김 병 기 위원	1
2. 김 종 대 위원	5
3. 김 중 로 위원	11
4. 김 학 용 위원	19
5. 백 승 주 위원	25
6. 이 종 명 위원	31
7. 이 철 희 위원	35

더불어민주당 김 병 기 위원

답 변 서

▲ 질의위원 : 김 병 기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제도 운영비〉

1. 공직자,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 등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 예방과 성실한 병역이행 유도를 위하여 병적을 별도관리 하고 있지요?
2. 이와 같은 사유로 2018년 정부안에 미반영된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제도와 관련된 업무협약비 및 홍보비 8천 5백만원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 질 의 1

1. 공직자,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 등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 예방과 성실한 병역이행 유도를 위하여 병적을 별도관리 하고 있지요?

△ 답 변

-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지난 9월 22일부터 대중문화예술인, 체육선수, 고소득자 등의 병적을 별도관리하고 있습니다.

▲ 질 의 2

2. 이와 같은 사유로 2018년 정부안에 미반영된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제도와 관련된 업무협약비 및 홍보비 8천 5백만원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 답 변

-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해당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산 소요액(증액) 85백만원
- 홍보비(일반수용비) 20백만원
 - 부산, 대구 등 4대 광역시 지하철 홍보(4개×500만원)
 - 업무협약비(업무추진비) 65백만원
 - 연예기획사, 연예인 협회 등 업무협약(2,161개×3만원)

정익당 김종대 위원

답 변 서

▲ 질의위원 : 김 종 대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모범사회복무요원 문화탐방행사 위한 증액 필요〉

1. 기존 모범사회복무요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상장만 수여해 왔음. 반면 현역병에게는 별도의 포상금과 유적지 탐방 기회를 부여, 현역병과 형평성을 맞추고 사회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포상금 및 포상휴가 개념의 문화탐방 기회 제공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은?

〈공정병역제도 운영 내실화〉

2. 고위공직자, 연예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역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약 3만 2천명의 별도관리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에 대한 홍보, 유관기관 및 단체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한 병무청의 의견은?

▲ 질 의 1

1. 기존 모범사회복무요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상장만 수여해 왔음. 반면 현역병에게는 별도의 포상금과 유적지 탐방 기회를 부여, 현역병과 형평성을 맞추고 사회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포상금 및 포상휴가 개념의 문화탐방 기회 제공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은?

-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현역병과 동일하게 문화탐방 행사 및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문화탐방 및 포상금 지급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혜택 방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모범사회복무요원 문화탐방행사 등 예산증액안(106백만원) >

○ 모범사회복무요원 문화탐방행사 : 96백만원(200명/ 2박3일)

(단위 : 백만원)

계	숙박비	식비	차량임차	문화공연	영상제작등	기타운영비
96	20	12	9	14	29	12

○ 표창대상자 포상금 지급 : 10백만원(51명×200,000원)

▲ 질 의 2

2. 고위공직자, 연예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역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약 3만 2천명의 별도관리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에 대한 홍보, 유관기관 및 단체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한 병무청의 의견은?

△ 답 변

-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지난 9월 22일부터 대중문화예 술인, 체육선수, 고소득자 등의 병적을 별도관리하고 있습니다.
-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해당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산 소요액(중액) 85백만원
 - 홍보비(일반수용비) 20백만원
 - 부산, 대구 등 4대 광역시 지하철 홍보(4개×500만원)
 - 업무협의를비(업무추진비) 65백만원
 - 연예기획사, 연예인 협회 등 업무협의를(2,161개×3만원)

국민의당 김중환 위원

답 변 서

▲ 질의의원 : 김 중 로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모범사회복무요원 문화탐방행사 위한 증액 필요〉

[현역병 중 자원병역 이행자 대상으로 문화탐방 및 포상금 지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모범복무자를 대상으로 단순초청행사로 개최하고 상패, 꽃다발, 기념품 등 지급하고 있음.]

1. 현역병과의 형평성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문화탐방행사 실시 및 포상금 지급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개선방안은?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증원 시급〉

[사회복무요원 복무인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안부에 임기제공무원 복무지도관 증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14년 이후 미반영 되고 있어 증원이 불가능 하므로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이탈, 부실복무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업비 증액을 통한 계약직 복무지도관이라도 충원해야 함.]

2. 복무지도관 1인당 관리인원을 400명 수준으로 우선 낮추어야 하며, 복무지도관 45명 증원을 위해서는 복무관리 사업 예산 17억 9천 3백만 원의 증액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개선방안은?

▲ 질 의 1

1. 현역병과의 형평성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사회복지부
요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문화탐방행사 실시 및 포상금
지급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개선방안은?

△ 답 변

- 사회복지부요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현역병과
동일하게 문화탐방 행사 및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모범 사회복지부요원에 대하여 문화탐방 및 포상금 지급 프로
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혜택 방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모범사회복지부요원 문화탐방행사 등 예산증액안(106백만원) >

- 모범사회복지부요원 문화탐방행사 : 96백만원(200명/ 2박3일)

(단위 : 백만원)

계	숙박비	식비	차량임차	문화공연	영상제작 등	기타운영비
96	20	12	9	14	29	12

- 표창대상자 포상금 지급 : 10백만원(51명×200,000원)

▲ 질 의 2

2. 복무지도관 1인당 관리인원을 400명 수준으로 우선 낮추어야 하며, 복무지도관 45명 증원을 위해서는 복무관리 사업 예산 17억 9천 3백만원의 증액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개선방안은?

△ 답 변

- 사회복지요원의 복무부실 예방 등 복무관리 강화를 위하여 복무지도관 증원을 위한 복무관리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 향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인력증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복무부실 예방을 위해
 - 수행자, 정신과질환자 등 복무부실우려자에 대하여 수시 근무 상황 모니터링과 필요시 출장상담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 사회복지연수센터에서 사회복지요원 임무, 복무규정위반자 처리 등 복무부실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 계약직 복무지도관 45명 증원 예산증액안 >

(단위 : 백만원)

합계	인 건 비				일반 수용비	여비	자산 취득비
	소계	보수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1,793	1,531	1,271	18	242	18	168	76

답 변 서

▲ 질의위원 : 김 중 로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병무용진단서 발급비 정확한 소요 반영〉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시 제출하는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을 보전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병무용진단서 발급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음.]

3. 예상되는 소요만큼 예산증액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발급 비용 보전 요건을 강화해야 하는 것인지?
4. '18년 예산 7억 2천만원으로는 또 다시 초과집행이 예상됨. 정확한 소요를 파악하여 초과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함.

▲ 질 의 3

3. 예상되는 소요만큼 예산중액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발급 비용 보전 요건을 강화해야 하는 것인지?

△ 답 변

-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병무용진단서 발급 비용 감축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예년과 같은 예산 초과 집행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7년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감축 대책

- * 병무용진단서 발급단가 인하
 - 대한병원협회, 발급병원 등 협조 : 15개 병원(4 ~ 10만원 → 2 ~ 4만원)
 - 보건복지부 병무용 진단서 발급비 상한가(2만원) 고시('17. 9. 21.)
- * 자체장비 적극 활용, 일시적 이상자에 대한 서류보완 지양

※ 병무용진단서 국고지원현황(최근 3년간)

('17. 9. 30.현재, 명/백만원)

계	지원인원	예 산 액	집 행 액
'17년	26,453	723	586 (81.1%)
'16년	40,204	661	875
'15년	35,092	661	762

▲ 질 의 4

4. '18년 예산 7억 2천만원으로는 또 다시 초과집행이 예상됨.
정확한 소요를 파악하여 초과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함.

△ 답 변

- 지난해까지 지급대상 인원이 증가하고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이 2만원에서 4만원까지 다양하여 예산이 초과 집행되었으나,
- 자체 시행하고 있는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감축 대책' 효과와 더불어 올해 9월부터 발급단가가 2만원 이하로 고시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위원

답 변 서

▲ **질의위원 : 김 학 용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공보의 등에 대한 복무실태 전수조사〉

[병무청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변호사·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중보건 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를 선발해 병역을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복무부실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지난 해 실시한 공보의 등 실태조사에서는 허위로 출장을 내고 국외여행 허가 신청 서류를 조작해 여러 차례 외국여행을 시도하다 구속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복무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 성실하게 근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사기와 자긍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병무청에서는 그동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단 한번도 공보의 등에 대한 복무실태 전수조사를 한 바 없음. 지난 해 실시한 실태조사도 전체 복무자 3,488명의 3.6%에 불과한 470명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졌고, 올해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태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계획임.]

1. 공보의 등의 복무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공정병역제도 운영 내실화〉

2. 공정병역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협회에 대하여 동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협회와 간담회, 업무협의 등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해 예산증액이 요구됨

▲ 질 의 1

1. 복무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공중보건 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복무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공중보건 의사 등은 농어촌, 낙도 등 복무관리 취약지역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므로 복무부실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다만, 공중보건 의사 등은 소속기관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병역법」 제4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전체 복무기관(2,400여개, 4,6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관계 기관의 인력 등 여건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 따라서, 복무 취약분야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분별 복무기관/인원

(’17. 10. 31. 현재 / 개, 명)

구 분	계	공중보건 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관	2,399	1,898	244	257
복무인원	4,666	3,614	583	469

▲ 질 의 2

2. 공정병역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협회에 대하여 동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협회와 간담회, 업무협의 등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해 예산증액이 요구됨

△ 답 변

-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지난 9월 22일부터 대중문화예술인, 체육선수, 고소득자 등의 병적을 별도관리하고 있습니다.
-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해당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산 소요액(증액) 85백만원
 - 홍보비(일반수용비) 20백만원
 - 부산, 대구 등 4대 광역시 지하철 홍보(4개×500만원)
 - 업무협의비(업무추진비) 65백만원
 - 연예기획사, 연예인 협회 등 업무협의(2,161개×3만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위원

답 변 서

▲ 질의위원 : 백 승 주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의무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 국고지원 1억 추가〉

1. '18년 예산 심의 시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보완서류 발급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가 증액(133백만원) 필요

〈정밀심리검사 제도 도입 14억 증액 요구〉

2. '18년 예산 심의 시 정밀심리검사 제도 도입을 위한 인건비 등 14억원 증액 필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자송달 관련 4억원 증액 요구〉

3. '18년 예산 심의 시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활용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 4억원 증액 필요

▲ 질 의 1

1. '18년 예산 심의 시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보완서류 발급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가 증액(133백만원) 필요

△ 답 변

- 이 사업은 병역법 개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예산 협의과정에서 소요예산 2억 5천 5백만원 대비 약 47%인 1억 2천 2백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 * 의무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 국고지원(병역법 제79조 개정, '17.9.22. 시행)
-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예산 증액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소요예산 산출근거

구 분	'18년	산 출 근 거
소요예산	2억 5천 5백만원	서류보완 예상인원 20,970명 × 발급단가 12,180원*
지급대상	20,970명	338,222명('18년 수검예상인원)×6.2%(최근 3년 평균)

* 발급단가 : 의무기록 8,388원(기본5매 4,388원 + 추가20매 4,000원)
 + CD 3,792원(CD 1장 평균 12,641원×30%)

▲ 질 의 2

2. '18년 예산 심의 시 정밀심리검사 제도 도입을 위한 인건비 등 14억원 증액 필요

△ 답 변

- 자체 정밀심리검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로서 인력 증원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 소요예산 내역(22명 증원 기준)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검사지 구입	의무자 여비	도구세트	시설비 등
1,361	855	84	50	78	294

* 임상심리사 22명(5급 10호봉 1명, 6급 7호봉 11명, 7급 5호봉 10명) 증원 기준

* 임상심리사 22명 증원 시 가능 검사인원 : 4,200명

- 정밀심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2차 심리검사 결과 정밀관찰자, 정신과 사유 귀가자 등 9,000여명으로 추산되어 임상심리사 37명 증원이 필요하나,
 - 1차로 임상심리사 22명을 증원하여 '18년부터 지능저하자 등 4,200명에 대해서 우선 자체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하고자 인력 증원 요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도 자체 정밀심리검사 실시를 위한 임상심리사 증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질 의 3

3. '18년 예산 심의 시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활용한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발송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 4억원 증액 필요

△ 답 변

- 스마트폰 등 전자적 통지서 교부방법 도입에 관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모바일 통지서 교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 '17. 8.28. 백승주의원 대표발의, '17.11.9. 본회의 통과, 12월 초 공포예정
- 예산 확보 후 모바일 통지서 발송시스템을 구축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모바일 통지서 발송 시스템 구축 예산 : 4억원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모바일통지 발송시스템 개발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5년 후 전액 회수 가능(우편료 절감)할 것으로 예상

자유한국당 이종명 위원

답 변 서

▲ 질의위원 : 이 종 명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병역의무자 여비 관련〉

1. 국가 안보를 위해 생계를 뒤로 하고 병역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실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 병역의무자 여비 숙박비는 지난 2015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일부 인상된 것이지만, 여전히 병역의무를 하면서 자기 돈을 더 써야 하는 실정임. 이를 현실화 하는 방안에 대해 병무청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람.

▲ 질 의 1

1. 국가 안보를 위해 생계를 뒤로 하고 병역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실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 병역의무자 여비 숙박비는 지난 2015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일부 인상된 것이지만, 여전히 병역의무를 하면서 자기 돈을 더 써야 하는 실정임. 이를 현실화 하는 방안에 대해 병무청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람.

△ 답 변

-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병역의무자 여비 중 숙박비는 2015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 기준이 되는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의한 최저 단가 5만원 까지 인상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산 소요액 4억 7백만원 : 숙박대상 40,619명(401km이상)×1만원

※ 병역의무자 숙박비 지급단가 변동내역

(단위 : 원)

구 분	'11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숙박비(1박)	30,000	30,000	30,000	40,000	40,000	40,000	40,000

* 「공무원 여비 규정」 숙박비 지급단가 :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 기타지역 5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위원

답 변 서

▲ 질의위원 : 이 철 희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병역판정검사 장비 임차료 증액 관련〉

1. 내년이면 6개 지방청의 DR 촬영기(X-Ray) 내용연수(10년)가 도래예정임. 현재 6개 제품 모두 단종된 상태이며, 10년이 도래하면 제조사가 법적으로 주요부품을 생산·보유해야하는 기간이 도래하여 제품 수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큰데 DR장비 임차료 예산을 증액해 원활한 병역판정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 질 의 1

1. 내년이면 6개 지방청의 DR 촬영기(X-Ray) 내용연수(10년)가 도래예정임. 내용연수 기간이 도래하면 제품 수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큰데 DR장비 임차료 예산을 증액해 원활한 병역판정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 답 변

- DR 촬영기는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사용빈도가 높은 장비입니다.
- 따라서, 장비 노후화 속도가 빠르고 고장 발생 횟수도 증가하고 있어 적기 교체가 필요한 실정으로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교체 대상 DR 촬영기(6대) 현황

검사반	구매연도	제품 단종 시기	부품 (의무)보유기간	비 고
서울청	2008년	2011년 9월	2019년 9월	새로운 모델 출시
경북청				
경인청				
충남청				
전남청, 경남청		2008년	2016년	업체 도산

* '18년 소요예산 : 312백만 원(DR 장비 6대*1대당 임차료<10개월분> 5,200만원)